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17일 오전 10시30  
분 세종시 세종필  
드GC 대회의실에  
서 열리는 건설공  
제조합 총회에 참  
석한다.



22개 건설단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단체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만8411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윤수기자 ays77@

# “이대로 가면 건설산업 무너진다” ‘적자늪’ 공공공사비 정상화 촉구

22개 건설단체, 정부-국회에 탄원서 제출... 31일 대국민 호소 대회

“오죽하면 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위협해집니다.”

정부와 국회,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해왔던 건설업계가 이번에는 대국민 설득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관련 단체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고자 오늘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을 하고, 오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건설단체들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사비 삭감 탓에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가 수주난을 겪는 한편,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 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됐다”며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도 미달하는 적자공사가 수도무적이다. 지난 15년간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은 “수익성 없는 곳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설단체들은 2만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탄원서에서 △적격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중

소규모(100억~300억원) 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신규 공공공사 공사원가에 법정 제수당 반영 등 정부·국회에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단체들은 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로 했다.

백종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매우 높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와 공공공사비 삭감,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절박한 마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건설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고 남북 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 공사비 깎고 또 깎고... 저가투찰 내모는 입찰제 대수술해야

팀핑가로 입찰한 업체  
낙찰 배제 법제화 필요  
'최저가 추락' 중심제 등  
낙찰률 상향조정 돼야

工期 연장 추가비용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 속  
공사비 보전 대책도 시급

22개 건설관련 단체가 16일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고, 대국민 호소대회까지 열기로 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이 아닌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까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 그 증거다. 업계에는 이대로 가면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건설업계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가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은 "정부도 공사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부처들이 모여 입찰제도 개선 TF(특별팀)를 만들고, 국회에선 관련 의원 입법

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와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선 '밑지는 장사가 어딨냐' 적자라면서 왜 공사에 참가하냐라고 되묻지만, 이는 '형편 어려운 사람에게 힘들면서 왜 사느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무례하고 무책임한 질문"이라고 항변했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서에 4대 특단 대책을 포함해 모두 9가지 건의사항을 담았다.

우선, 팀핑입찰 낙찰배제 가격기준(순공사원가)과 중소기업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정가격 중 재료·노무·경비를 합친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시장단가보다 88% 이상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사에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이는 박명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낙찰률 상향조정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지난 17년간 고정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80~87.8%)을 10%포인트 올리고,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도 정상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중심제 평균낙찰률은 77.6%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제도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건설업계는 팀핑기준 상향(70%~80%),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공중별 단가심사 기준 개선, 동전자 처리기준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등을 통해 중심제의 평균낙찰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형 입찰제도 역시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뀌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을 개선(중심제 평균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하고, 물량내역서 조정 시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의무도 법제화를 요구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토록 법률에 담자는 것이다. 신청횟수(1회),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 등 불합리한 총사업비 관리지침도 재개정을 통한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

법에 담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사비 부당삭감, 부당특약 조건, 이의신청 불허 등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요구도 담았다. 지난 4월 정병국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공사 가격 산정기준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 시에만 적용하고 '사급자재'에 대한 시중 물가지 가격을 적용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일반관리비율을 6%에서 8%로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특히 사회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공사입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항목은 조정 없이 100% 반영해 투찰토록 하되, 직접공사비 하락을 막기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때 해당 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빼고 평가하자는 요구가 담겼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